APEC 기간중 항만 보안등급 2등급으로 격상

해양부, 정상회의 전후인 11월 7~20일 동안

해양수산부는 10월12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, 법무부, 관세청,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항만보안위원회를 개최하고, 다음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전후인 11월 7~20일 동안 부산항의 항만 보안등급을 평시수준인 1등급에서 경계수준인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이 기간 중 부산항에 기항하는 모든 국제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외항선박은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해당선박의 보안등급을 최소한 2등급으로 유지해 외부인 출입통제와 선용품 등 화물 검색 강화, 선내 순찰 강화 등의 선박보안활동을 시행해야 한다.

항만당국도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한 검색빈도를 100%,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50%까지 확대하고, 청원경찰 근무시간도 3조 2교대에서 24시간 2교대로 조정키로 했다. 또 항만순찰 강화, 항만내 화약류·독극물 등 위험물 취급 제한, 외항선박에 대한 테러경계 강화조치 등 강화된 항만 보안조치 활동을 시행키로 했다.

다만 컨테이너 운송차량에 대한 검색은 당초 30%(1등급은 5%)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최지인 부산의 도로 환경과 외국 경쟁항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해당기관이 지역항만보안협의회와 상의한 후 현지 사정에 적합하게 검색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.

다른 항만에는 테러예방 효과와 이용자 불편을 함께 고려해 테러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국제여객부두와 대형 위험물부두가 있는 6개 항만(인천, 평택, 군산, 속초, 울산 및 마산항)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안등급 상향절차 없이 2등급에 준하는 수준의 항만경계 강화조치를 시행키로 했다.

해양부는 보안등급 상향기간중 해운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테러 비상대책본부를 편성·운영하고 국정원 등 보안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. 또 항만이용자에게는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

해양오염 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

해양관리공단 설립 등 해양오염방지법 개정

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·개편되고, 해양오염물질 배출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. 또 바다모래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 행위에 대한 해역이용 중점검토제도가 도입된다.

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1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"각종 개발중심의 국가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,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"며 이같이 밝혔다.

강 차관은 우선 민간부문의 해양환경조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"지난 1995년 7월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·개편해 기름방제 업무외에 해양환경의 보전·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할 것"이라고 밝혔다.